



“안인득, 피해망상 속 본인 방어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했던 정신감정 담당의 A씨(여)는 26일 “안인득은 피해망상이 아주 심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이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은 안인득의 심리상태가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신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당시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경찰들에게 ‘공포탄인 거 안다’고 하는 등 상대방의 얼굴을 알아봤고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안인득은 망상으로 인해 판단력에 손상이 있다. 판단력이 결여된 건 아니다”면서 “망상에 지배받아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 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인득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냐’는 질문에 A씨는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망상 속에서 그들(피해자)은 가해자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성을 보이는 게 조현병을 앓는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인지’ ‘안인득이 피해망상 중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겪은 언급을 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A씨는 “일반적이지 않다. 충동 조절이 안 된다고 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환자는 많지 않다”면서 “본인에게 해를 가하는 무리들이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주고 시시때때로 가해하려고 해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 시멘트세 신설법 자동폐기 우려에 4개 도 반발 확산

### 충북·강원·경북·전남 시민단체 및 지방의회, 국회비판 성명

3년 넘게 표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충북·강원·경북·전남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4개 도(道) 지역 지방분권 운동조직과 지방의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세 신설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멘트세 신설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뜻밖에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과 연관이 없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가 한 명이 반대한다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 사들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려 60년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으로, 우리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법안소위 개최를 통한 상임위 통과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

포 40kg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9월 국회에 발의된 지 3년2개월이 지났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시멘트세까지 신설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반발해 왔다.

반면 시멘트 생산시설이 몰려 있는 충북·강원 등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해 왔다.

사실상 무기한 보류 결정이 난 시멘트세 신설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는 총선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안 심사 재개는 요원한 상황이다.

## 전공노, 한국당 앞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6일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6일 “자유한국당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억압해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를 복원하고 부당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며 “한국당은 명예회복과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절박한 공무원 해고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비참한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고자의 76%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한편 가족과 동료와의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복직의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8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며 “14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지켜보고 있음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술집서 상습행패 승복입은 노숙자 영장 신청

화순경찰서는 26일 승려 행세를 하고 다니며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화순읍 한 술집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순읍 일대에서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식당, 술집 주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평소 승복을 입고 다니며 시주를 요구하는 등 승려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유사 전과를 가지고 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 “왜 붙잡아” 새벽 변화가 주먹다짐 호객꾼-남성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20~30대 남성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35)와 B씨(35)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 서구 한 변화가에서 C씨(25) 등 3명이 호객행위를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호객꾼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가 폭행에 가담한 업주 D씨(26)도 함께 입건됐다.

A씨 등은 이날 변화가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길을 지나다 호객꾼들이 길을 막으며 붙잡아 이에 격분,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일행은 업주 D씨에게 “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연락했고 D씨가 현장에 가담하면서 쌍방 폭행으로 번졌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최영호 전 남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아파트 건설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공역수사대는 25일 아파트 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4명과 브로커 2명 등 총 6명도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구청장 등은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구청장은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280% 폭리 무등록 대부업 일삼은 사채업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훌쩍 뛰어넘는 폭리를 취한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부터 채무자 198명에게 242회에 걸쳐 13억5052만여 원을 빌려줬다.

여기에 더해 A씨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리로 채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60만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때까지 65일동안 매일 122원을 받아 연 280.8%의 이자를 받는 등 총 101차례에 걸쳐 5억3036만여원을 빌려주고 7억3104만여원의 원리금을 받아 2억원 이상의 부정 이득을 취했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